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7

June 2015 vol.124



이달의 이슈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
-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생생리포트

금융에서 복지를 보다!



인포그래픽스

서울 시민의 졸업 전공과 직업은
얼마나 일치할까?

경제동향

요약/생산/ 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경제통통

FOCUS/ZOOM IN/HOT ISSUE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경제

발행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연구책임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장윤선 (연구위원), 정의영 (연구위원)

편집위원 서울연구원

최봉 (연구위원), 김범식 (연구위원), 김묵한 (연구위원)

서울시 경제정책과

이해우 (과장), 김선수 (팀장), 나성조 (주무관)

발행일 매월 말

발행처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소 (우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33

팩스 (02)2149-1289

홈페이지 www.si.re.kr

*본 간행물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이슈

- 06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
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12 |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전용식(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연구위원)

생생리포트

- 20 | 금융에서 복지를 보다!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팀장)

인포그래픽스

- 28 | 서울 시민의 졸업 전공과 직업은 얼마나 일치할까?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동향

- 34 | 요약
- 35 | 생산
- 37 | 소비
- 38 | 고용
- 41 | 물가
- 42 | 부동산
- 44 | 금융
- 49 | 수출입
-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정의영(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통통

- 56 | FOCUS / ZOOM IN / HOT ISSUE
김가영(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이달의 이슈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ydkim@kif.re.kr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전용식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연구위원
yongsik.jeon@kiri.or.kr

이달의 이슈 | 0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

김 영 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ydkim@kif.re.kr

1.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평가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0년대 접어들어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으며 학계나 언론을 통해 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정책 당국도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는 작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그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2015년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약 1,1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감안하면 2015년 상반기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개별 가구(또는 차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금융 및 경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적정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가계부채는 개별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축적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가계부채와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계가 소비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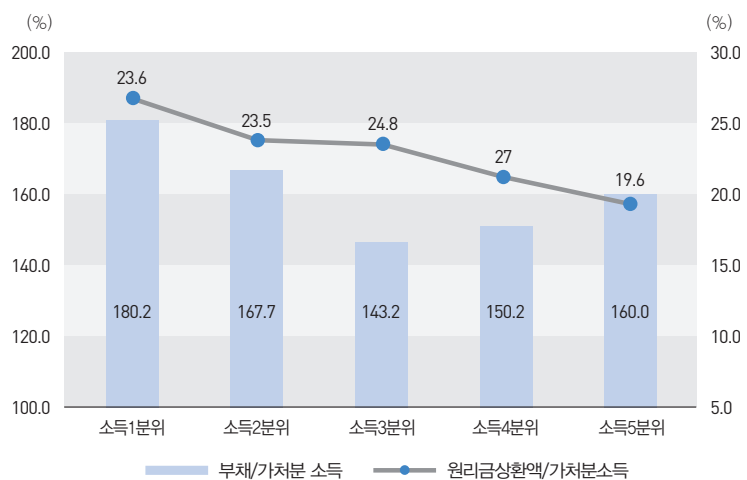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경제학 박사
-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2015), 국내 기업부문의 레버리지 추이와 부실위험 축소방안: 외감기업에 대한 미시적 분석(2014),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 및 과제(2014) 등

줄임으로써 거시적으로는 내수 성장을 저해한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증가 속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은 물론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소득 계층들의 상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비록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해보면 현재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대표적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2014년)의 결과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전체 평균이 156.4%이며, 원리금상환액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21.5%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살펴볼 경우 저소득층인 1분위의 부채 비율이 180.2%로 가장 높았으며, 원리금상환액의 비율 역시 1분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4)

[그림 1]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전체)

특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할 경우 소득분위별 부채에 대한 부담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523.8%, 273.6%이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역시 각각 68.7%, 36.9%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저소득층 가구는 전체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지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부채비율과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각각 195.7%와 23.1%로 나타났다. 요컨대, 소득분위별 부채에 대한 부담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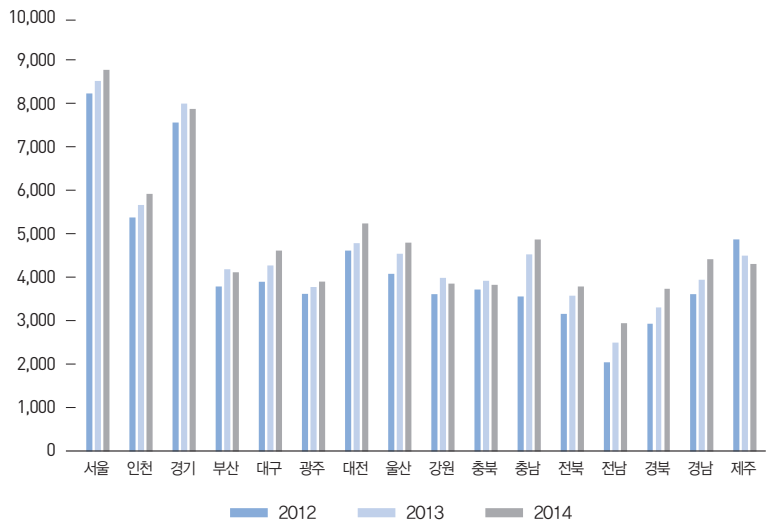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등 소위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가계부채 현황을 평가하면 조금 다른 각도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4)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계부채 규모는 5,994만 원이지만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가계부채 규모를 시·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이 8,78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평균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이 2,942만 원으로 가장 작은 평균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은 8,015만 원이며, 비수도권은 4,152만 원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은 5,889만 원으로 서울, 경기지역과 비교해 다소 큰 차이가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평균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등 주거비용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18.0%, 수도권이 19.8%, 비수도권이 15.5%이다. 특히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 규모를 가진 서울의 가계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인천,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결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가계의 가계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국 평균 가계 경상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28.2%인데 반해, 수도권이 161.3%, 비수도권이 94.2%로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이 174.6%로 가장 높으며, 전남은 71.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소위 주택담보대출로 대표되는 담보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가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4)

[그림 2] 지역별 가계부채 규모

3.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평가와는 달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대응 수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대책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 및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가계대출의 적정한 증가를 유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금리충격과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만기일시 상환대출 위주의 국내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형태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당국의 대책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이듬해인 2012년 2월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가계부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

2014년 2월 발표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방안’에서는 가계부채 과다문제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에 추진하였던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의 가계부채 구조 전환을 좀 더 빠르게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상황을 통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당국의 인식 전환 및 정책 추진과 달리 아직까지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최근 국내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가계부채 관련 정책들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4년 8월에 발표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합리화 조치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인 LTV·DTI 규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하지만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여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미 누적된 국내의 가계부채가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0%까지 낮추면서 가계부채는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향후 정책방향

사실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의 총량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가계의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단기적으로 부실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나아가 전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다거나 점진적으로 가계부채의 상환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책당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가계부채의 감축은 경제시스템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 대응과는 별도로 서울시 등 지방정부도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 부담은 상당 부분 높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과 연관되어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분포나 인구 밀집 정도를 감안하면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서울시는 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정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의 저축 장려를 위한 매칭 방식의 저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결코 금융부문만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개별 가계의 다양한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채탕감과 같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전략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충격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생각건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키우는 국민들의 소득 증대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금융부문의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결합하여야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금융연구원, 2013, 「가계부채 백서」
2.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달의 이슈 I 02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전 용 식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연구위원
yongsik.jeon@kiri.or.kr

1.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가계신용이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대출금인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거래인 판매신용의 합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15년 1분기 기준 1,099.3조 원이며 이 중 가계 대출은 1,040.4조 원, 판매신용은 58.9조 원이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75.3조 원, 기타대출이 152.1조 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이 94.6조 원, 기타대출이 133.1조 원으로 나타난다. 보험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285.2조 원으로 분석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6년 11.8%를 기록한 이후 2007년 9.6%, 2009년 7.3%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과 2011년 소폭 상승하였다. 이듬해 5.2%로 하락하는 듯 했으나 2014년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미국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前 한국금융연구원, 삼성금융연구소, 우리금융지주,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現 보험연구원
-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2015),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2014), 자동차 보험회사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013) 등

들어 6.6%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명목경제성장률은 2007년 8.0%, 2010년 9.9%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 3.4%를 기록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3% 대에 머물러있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명목경제성장률은 2007년 이래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나, 2012년 이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가계신용 현황

[단위: 조 원]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 기관	판매 신용	합계
	주택담보 대출	기타 대출	주택담보 대출	기타 대출			
2007	245.8	117.9	47.1	63.4	156.0	35.3	665.4
2008	254.7	133.8	56.4	70.3	168.3	39.9	723.5
2009	273.7	135.8	64.8	75.5	184.5	41.7	776.0
2010	289.6	141.8	73.2	88.9	200.2	49.4	843.2
2011	308.9	147.0	83.1	100.6	221.8	54.8	916.2
2012	318.2	149.0	86.0	106.6	246.1	57.9	963.8
2013	328.9	152.2	89.2	116.9	275.8	58.5	1,021.4
2014	365.6	154.1	95.0	131.2	281.7	60.2	1,087.7
2015 1분기	375.3	152.2	94.6	133.1	285.2	59.0	1,099.3

자료 한국은행

2.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와 실물 경제, 그리고 금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는 주거 혹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

며,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매입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 수익이 실현되고 이를 새로운 주택담보대출과 결합하여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창업이나 운영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그리고 생활 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 저신용 계층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특히 신용 카드회사의 카드대출,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부채는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부채 증가세도 함께 둔화된다. 경기가 호황인 경우 가계와 기업은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부채를 늘리지만, 경기가 부진할 경우 투자 감축, 소비 감소 등을 통해 부채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감은 대체로 경기 변동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가계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가계부채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택 구입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난 후 경기 부진,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은 취약해지고 이는 대출이자 연체, 강제적인 주택 매도 상황으로 이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사업 관련 자금을 차입한 자영업자는 경기 부진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진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소득과 신용도가 심각히 악화되면 이들이 금융 소외자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금융 소외자의 경우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고 이를 통한 고금리 대출은 이미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를 질적으로 더욱 악화시킨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 국내의 금융 소외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6년 이후에는 전세 가격 상승이 전세 자금 대출과 주택 매매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가계부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준 금리를 포함한 국내 금리가 추세적으로 낮아진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현상은 가계부채 증가가 주는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경기 회복 부진과 저신용자들의 상환능력 위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회사는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때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민들의 금융 소외를 확대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가

계부채의 경제적 부담이 저소득층에서부터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어 서민 생활을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한다. 나아가 경제적 약자의 증가로 사회 안전망이 훼손되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는 국가채무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

3. 서민금융과 사회적기업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실업자를 줄이고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정부는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지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소금융재단과 각 금융 기관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의 소액 금융(Microfinance)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출 규모면에서 시중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이 미소금융재단의 소액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의 소액금융 대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미소금융재단의 대출이 사회적기업의 창업 자금이나 사업운영 자금 등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국내 주요 소액금융기관 현황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합계
기간	2008.7 ~2014.12	2010.7 ~2014.12	2010.11 ~2014.12	2008.12 ~2014.12	
시행 기관	미소금융 재단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 저축은행	시중은행	국민행복 기금	
대출 금액	1,3조 원	6,4조 원	10,1조 원	2,3조 원	20,2조 원
최대 대출 금액	창업자금 5,000만 원, 사업운영자금 1,0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최대 3,000만 원	
금리	연 4.5%	최대 8.07% / 9.63%	평균 11~14%	은행 대출이자 연 5.5%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2.5%~6.5%	

미소금융재단의 소액자금 대출 운용 목적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곤란하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확보되지 않아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으로 정의되며, 사회 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①

최근 발표된 국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이 갖는 한계를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시행된 이후 국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김재인·정건섭(2010)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②한다. 신국현·서순탁(2014)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정부 주도적’이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며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라준영(2010)의 연구는 국내 사회적기업이 사업전략 부재, 취약한 수익 구조, 높은 정부 보조금 의존 등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위 연구들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아직 충분한 자생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국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두고 밀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수익창출과 자금조달 방안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저영리유한책임회사(Low 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2008년에 도입되었고 2005년 영국에서는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라는 기업형태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적 밀착 지원의 성공적 예는 전북은행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전북은행은 도내 거주 학생, 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브크레딧론’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17,826명에게 889억 원을 대출하였고, 2009년 2월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율은 2.69%에 불과하다. 전북은행의 ‘서브크레딧론’은 지역 서민의 금융 애로를 은행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직원들의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 전략이 결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① 민간 소액금융기관인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등은 사회적기업, 음식점, 서비스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1,930건, 약 374억 원을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 자금으로 지원하였다.

② 2009년 부산대 박선화 교수팀에서 발표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회적기업 중 71.9%가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다.

4. 결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가계가 부채상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계가 안정된 소득 흐름을 바탕으로 부채상환 의지를 가지고 부채를 줄여나가거나 경기가 회복되어 소득 증가 속도가 부채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가계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저성장의 현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의 부채 상환 여력 위축은 가계 소비 감소를 통해 내수에 악영향을 주며 현재 소비뿐만 아니라 미래 소비에까지 영향을 준다. 사회적 측면에서 부채 상환 여력 위축은 실업, 취약계층 및 금융소외 계층 확대, 사회 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복지 부담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까지 전이시킨다.

IMF 외환위기와 뒤 이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국내에 사회적기업, 서민금융 제도가 도입되었다. 앞서 언급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책이 재검토되고, 지역 사회와 밀착된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제도가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서민금융이 국내 가계부채 문제 극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서민 경제의 자생력을 높여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할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생리포트



금융에서 복지를 보다!

- I.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태동과 현황
- II.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성장
- III.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안정화 방안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지일철 팀장 maya0520@daum.net

금융에서 복지를 보다!

I.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태동과 현황

1.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배경

1)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발표

2012년 들어 가계부채 1000조 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었다. 서울시민의 가계 빚의 규모는 전국 대비 약 30%로 추산되고 있다. 그만큼 서울시민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며 2012년 3월 서울시는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가계부채 상담을 위해 모든 자치구와 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47개를 설치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무상담, 창업상담 및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운영의 문제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는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자치구 중심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내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였다. 또한 단순 대출상담 위주로 진행되어 가계부채 상담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3)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구제제도 등 정보제공 필요

이에 따라 대상별·기관별로 운영 중이던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통합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과 상담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상담과 채무조정 등의 구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였다.

4) 금융에 복지를 통합한 종합상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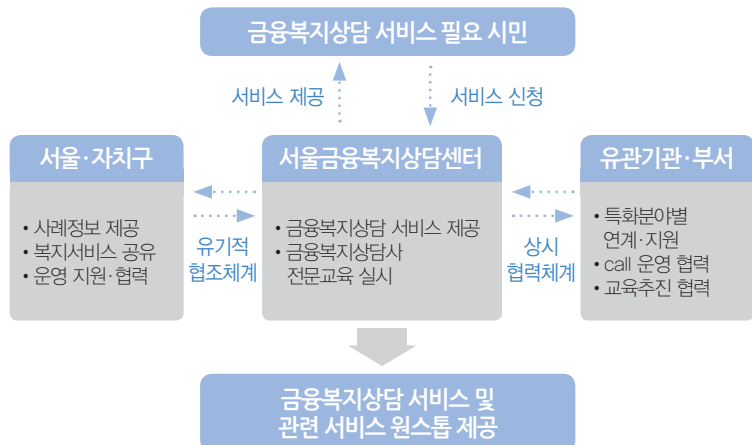
금융소외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계부채와 같은 재무적 문제뿐 아니라 주거, 고용, 교육, 건강 등 종합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담센터를 금융 중심이 아닌 복지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2013년 7월15일 서울시 복지재단 내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6개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2.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현황

1) 인력 : 총 22명(일반직 5명, 상담직 17명)

2) 기능과 역할

- ① 재무컨설팅 - 금융 및 가계 재무상담, 생애재무설계 등
- ② 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실무지원
- ③ 복지전달체계 연계 - 고용, 주거, 복지, 법률 등 복합욕구에 대한
자원연계
- ④ 금융교육 - 자영업자, 학생, 복지시설 이용자 등 지출관리,
신용관리 등 교육
- ⑤ 상담서비스 체계



〈그림 1〉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현황

3) 지역센터 설치 및 개소 (2013년 7월) ※ 영등포 센터(2014년 4월)

- ① 시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및 자치구청에 설치하였으며 별도 상담공간을 마련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 ② 서울 전체를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센터별 담당 자치구를 설정하였다.

〈표 1〉 지역센터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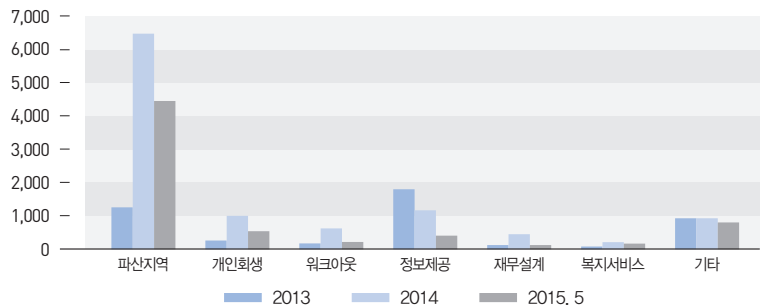
구분	위치	상담사	담당지역
중앙센터	서울시 복지재단	4	지역센터 총괄, 금융교육 등 특성화 사업추진
1센터	서울시청	2	종로, 중구, 동대문(3개 구)
2센터	성동구청	3	성동, 광진, 강남, 송파, 강동, 중랑(6개 구)
3센터	마포구청	2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4개 구)
4센터	도봉구청	2	도봉, 노원, 강북, 성북(4개 구)
5센터	금천구청	2	금천, 관악, 동작, 서초(4개 구)
6센터	영등포구청	2	영등, 강서, 양천, 구로(4개 구)

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성장

1. 금융복지 종합상담

1) 금융복지 상담 : 22,379건(2013.7~2015.5 현재)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이 전체 상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② 매년 단순 문의 및 정보제공 등 단순상담이 감소하고 채무조정, 재무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채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2] 상담내용별 현황

- 2) 채무자의 특성에 맞춰 예약상담, 야간·인터넷 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센터 개소 및 MOU〉



〈찾아가는 상담〉



〈정책토론회〉

2. 전담재판부 (Fast Track) 운영

- 1)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신속한 파산면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년 1월)

- 2) 면책결정 시까지 종전 10개월 내외 소요기간이 3개월 내외로 단축

〈표 2〉 채무조정 신청 현황

연도	계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 금액
계	1,099건	492건	39건	1,917억 원
2013	122건	118건	4건	131억 원
2014	653건	606건	47건	1,174억 원
2015.5	324건	309건	15건	612억 원

3. 서울형 공공재무컨설팅

재무상담이 재정적으로 취약하거나 채무가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복지시설 이용자, 학교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 실시[2014년 43회(865명), 2015년 5월 현재 4회(98명)]

4. 위기가정 발굴 지원 및 자치구 협력사업 추진

- 1) 서울시 더함복지 상담사와 동행하여 위기가정 발굴 및 재무상담 지원
- 2) 광진구, 서대문구, 구로구 등 자치구 더함복지 상담사,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시설 이용자, 공무원 등 재무교육(58회, 2,000여 명)

- 3) 자치구와 협력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금융서비스 지원

5. 방송·언론 등 홍보

- 1) KBS, TBS 등 방송 150회 및 언론보도 200여 회

- 2) 월 평균 1회 서울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시민 칭찬 사례 게시(22회)



〈TBS 방송 출연〉



〈팟캐스트 제작〉



〈KBS 방송 출연〉

Ⅲ.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안정화 방안

1. 지역센터 확대

가계부채 문제는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센터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15년 7월에 3개 소가 추가로 확대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2. 복지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채무자에게 시급한 문제는 부채이겠지만 주거, 고용, 복지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공과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국내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문제가 된 상황을 조정하는 채무조정은 물론 건전한 가정경제를 위한 예방적 측면의 금융교육과 재무 상담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저소득 금융 소외자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포그래픽스

서울 시민의 졸업 전공과 직업은
얼마나 일치할까?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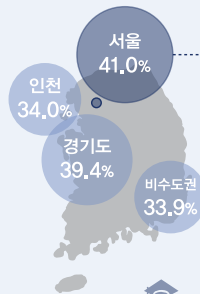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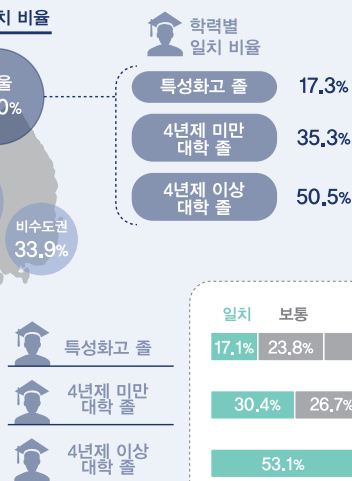
서울 시민의 졸업 전공과 직업은 얼마나 일치할까?

서울 시민의 졸업 전공과 직업은 얼마나 일치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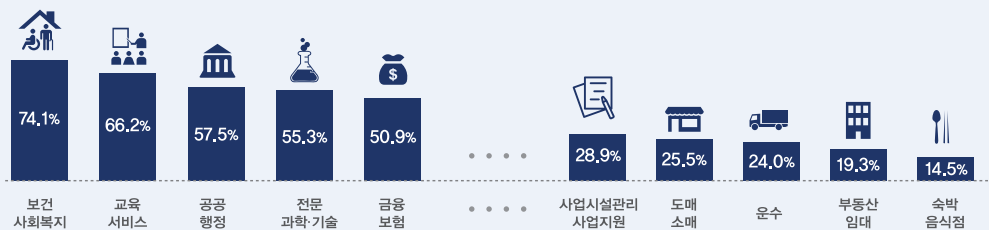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



학력별·성별 전공과 직업 일치 비율



산업별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



주: '일치'는 설문조사 5점 척도 중 '매우 일치'와 '일치하는 편'의 응답을 합한 비중이며 응답자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실업고) 및 대학(4년제 미만, 4년제 이상) 졸업자로 취업한 적이 있거나 현재 취업중인 사람

주: 위 응답자 중 현재 취업중인 사람만 대상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전공과 직업이 ‘일치’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고, 서울이 41.0%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교육정도가 올라갈수록 전공과 직업 ‘일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자의 전공과 직업 ‘일치’ 비율이 42.2%로 여자 39.7%보다 높게 나타남

서울에서는 교육정도가 올라갈수록 전공과 직업 ‘일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특성화고 졸업자는 17.3%만이 ‘일치’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일치’ 한다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는 50.5%가 일치한다고 응답함
-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교육정도가 올라갈수록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특성화고 졸 17.1% → 4년제 미만 대학 졸 30.4% → 4년제 이상 대학 졸 53.1%, 여성: 특성화고 졸 17.6% → 4년제 미만 대학 졸 39.1% → 4년제 이상 대학 졸 47.1%)

서울에서 전문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숙박·음식점’ 14.5%, ‘부동산·임대’ 19.3%, ‘운수’ 24.0% ‘도매·소매’ 25.5% 등 쉽게 창업이 가능한 생계형 자영업종은 전공과 직업 ‘일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보건·사회복지’ 74.1%, ‘교육서비스’ 66.2%, ‘공공·행정’ 57.5%, ‘전문·과학·기술’ 55.3%, ‘금융·보험’ 50.9% 등 자격증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의 전공과 직업 ‘일치’ 비율은 높게 나타남

〈표 1〉 2014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

[단위: %]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비율	41.0	34.0	39.4	33.9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표 2〉 2014년 서울 성별 · 학력별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

[단위: %]

		일치	보통	불일치
서울 전체 합계		41.0	46.6	33.3
성별	남자	42.2	24.2	33.6
	여자	39.7	27.5	32.9
특성화 고졸 합계		17.3	27.4	55.3
성별	남자	17.1	23.8	59.1
	여자	17.6	31.5	51.0
대학(4년제 미만) 졸		35.3	28.6	36.1
성별	남자	30.4	26.7	42.9
	여자	39.1	30.1	30.8
대학교(4년제 이상) 졸		50.5	24.2	25.4
성별	남학생	53.1	23.6	23.3
	여학생	47.1	24.9	28.0

주 '일치'는 설문조사 5점 척도 중 '매우 일치'와 '일치하는 편'의 응답을 합한 비중이며 응답자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실업고) 및 대학(4년제 미만, 4년제 이상) 졸업자로 취업한 적이 있거나 현재 취업중인 사람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표 3〉 2014년 서울 산업별 전공과 직업 일치 비율

[단위: %]

	일치	보통	불일치
합계	43.4	23.0	33.6
제조업	39.3	35.2	25.6
건설업	36.7	31.5	31.8
도매 및 소매업	25.5	26.5	48.0
운수업	24.0	31.9	44.1
숙박 및 음식점업	14.5	20.1	65.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5	21.5	28.0
금융 및 보험업	50.9	23.1	26.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	16.2	6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3	16.5	28.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8.9	26.0	4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7.5	9.6	32.9
교육 서비스업	66.2	15.9	1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4.1	11.2	14.7

주 위 응답자 중 현재 취업중인 사람만 대상이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공공행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서비스업 제외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경제동향



요약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정의영 연구원 altophone@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경제동향 | 요약

요약 | 5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산

- 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하여 생산 부진
- 5월 제조업 출하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 재고지수는 1.3% 증가하여 경기 둔화/하강 국면 지속을 시사



소비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4,06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하여 2015년 들어 가장 많고, 전국(7조 1,221억 원)의 33.8% 차지
- 5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8%로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 소비는 증가



고용

-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3천 명(0.6%) 증가
-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감소



물가

- 2015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0.9% 소폭 상승하여 저물가 기조 지속
- 상품물가지수(-0.3%)는 하락한 반면 신선식품물가지수(5.0%), 서비스물가지수(1.7%)는 상승



부동산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 등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0.3% 상승한 101.4 기록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재건축 이주 발생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전세 매물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7% 상승한 113.9 기록



금융

- 서울의 5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07조 2,967억 원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
- 서울의 5월 은행 가계대출은 196조 1,069억 원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
- 서울의 5월 보증금액,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1,182억 원과 5,54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2.9% 감소, 4.5% 증가
- 도·소매업에 대한 신용 보증은 전월 대비 4.3% 감소한 434.4억,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 보증은 전월 대비 3.9% 증가한 278.5억 원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증지원 건수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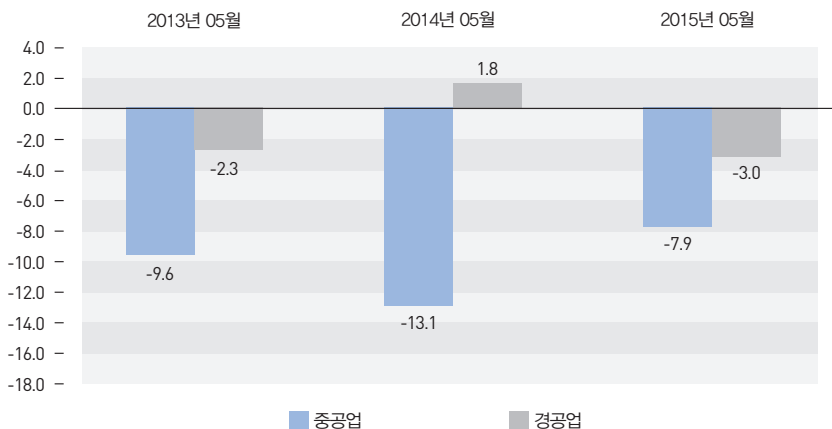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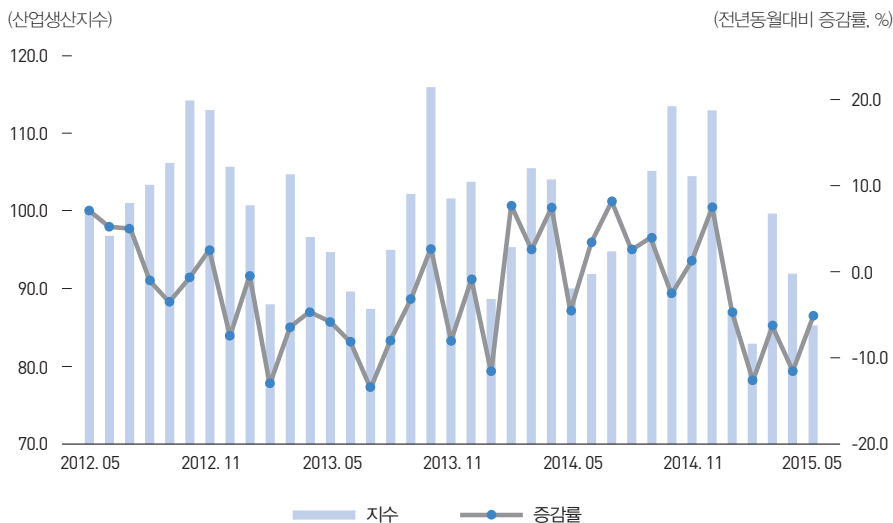
수출입

- 서울의 5월 수출은 47.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8%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5월 수입은 1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 품목별로는 원유,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생산

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5.6(201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

-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5월까지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
- 중공업 부문은 7.9%, 경공업은 3.0%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여 생산 부진
-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화학제품(45.8%), 고무 및 플라스틱(28.9%), 의복 및 모피(4.5%) 등은 증가한 반면 가죽 및 신발(-23.5%), 기계장비(-22.5%), 인쇄 및 기록매체(-18.2%) 등은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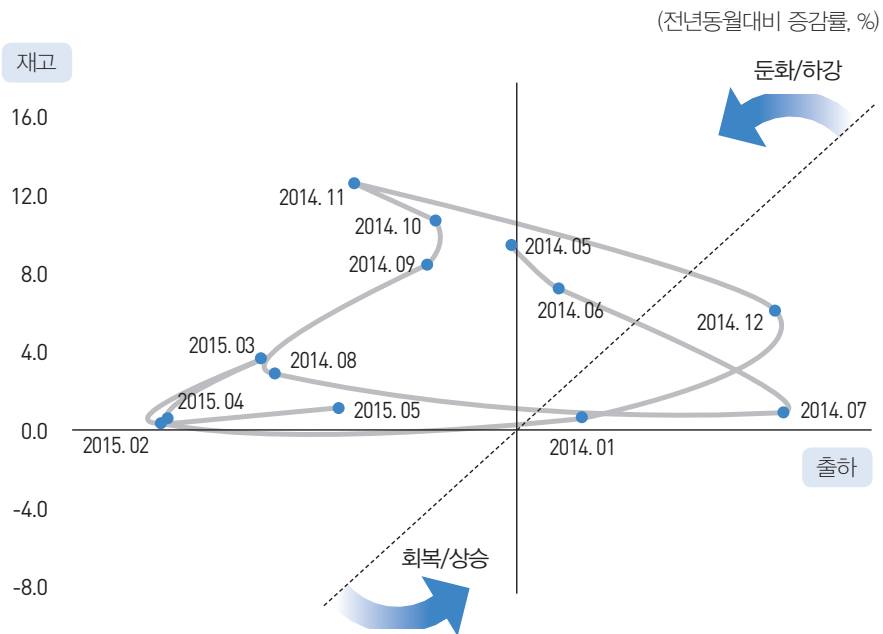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경제동향 | 생산

출하·재고 순환

서울의 5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5월 출하지수는 89.1(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
- 서울의 5월 재고지수는 119.9(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
- 재고·출하 지수는 경기가 둔화/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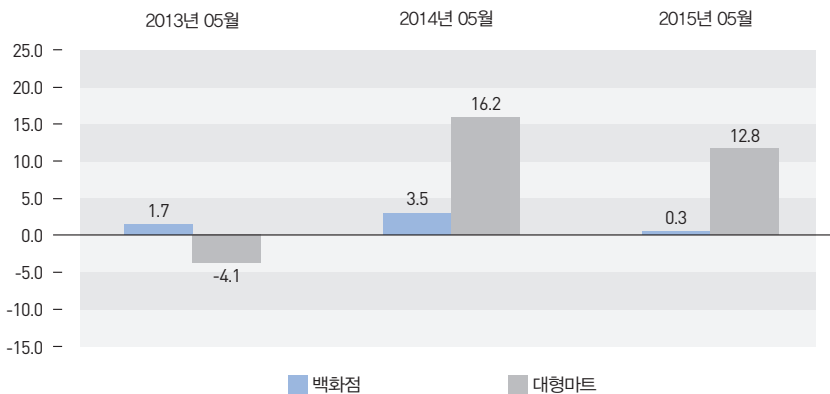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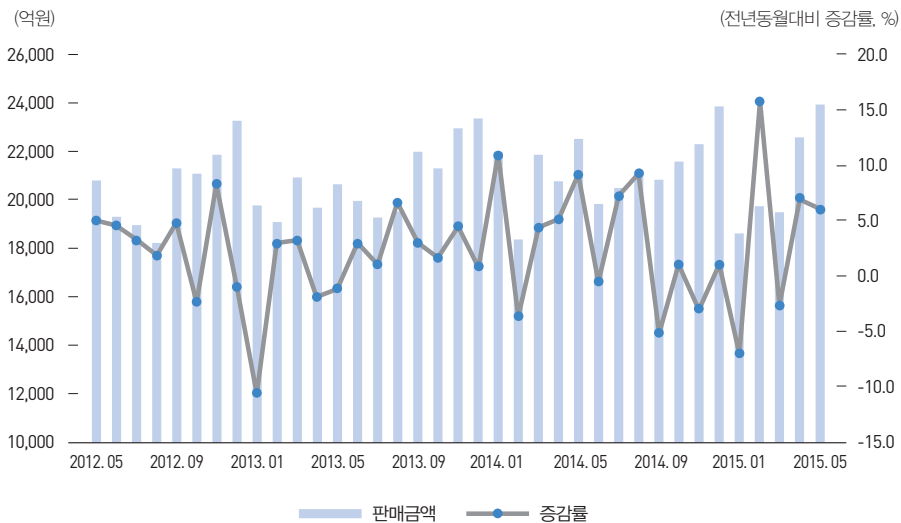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소비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15년 들어 가장 높고,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4,068억 원으로 전국(7조 1,221억 원)의 33.8%
- 5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2,070억 원으로 전국(2조 6,766억 원)의 45.1%,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1,209억 원으로 전국(4조 4,456억 원)의 27.0%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0.3%)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 판매액은 급증(12.8%)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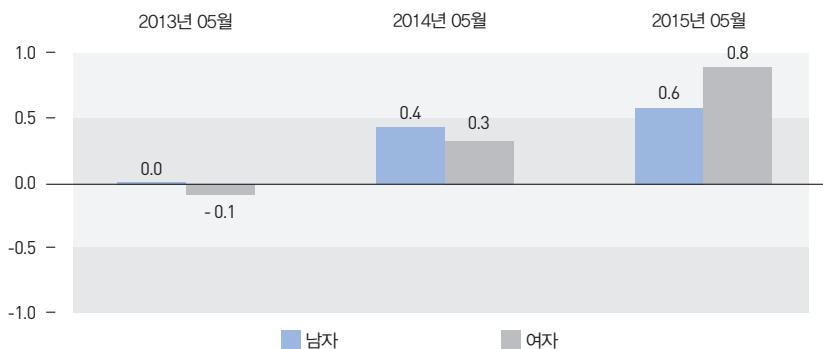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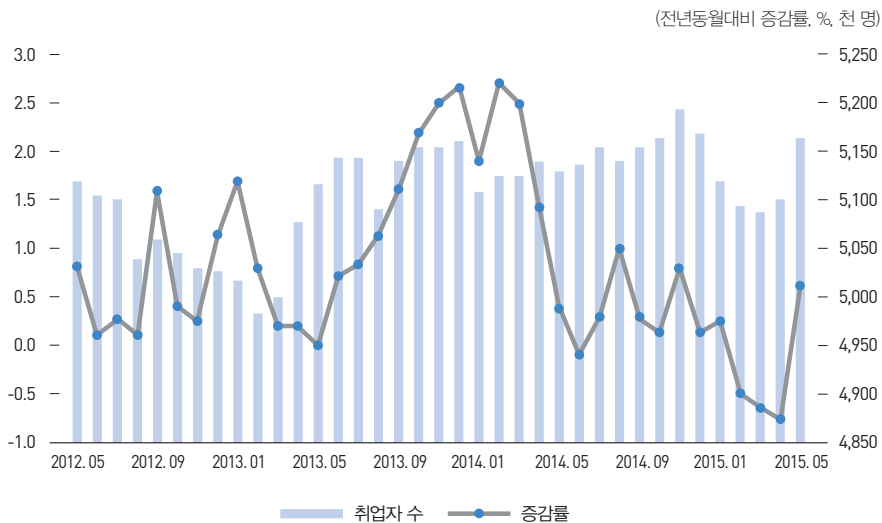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경제동향 | 고용

취업자

서울의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

-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3천 명(0.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 명(0.6%) 증가하고, 여자는 228만 1천 명으로 1만 7천 명(0.8%)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1만 4천 명(4.3%), 도소매·숙박음식업이 5만 명(3.6%), 제조업이 1만 1천 명(2.2%), 증가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2만 명(-2.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 1천 명(-1.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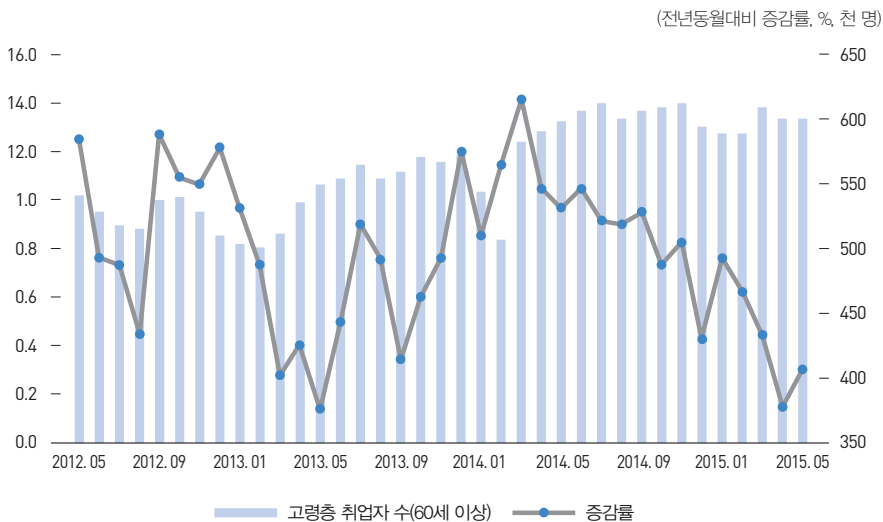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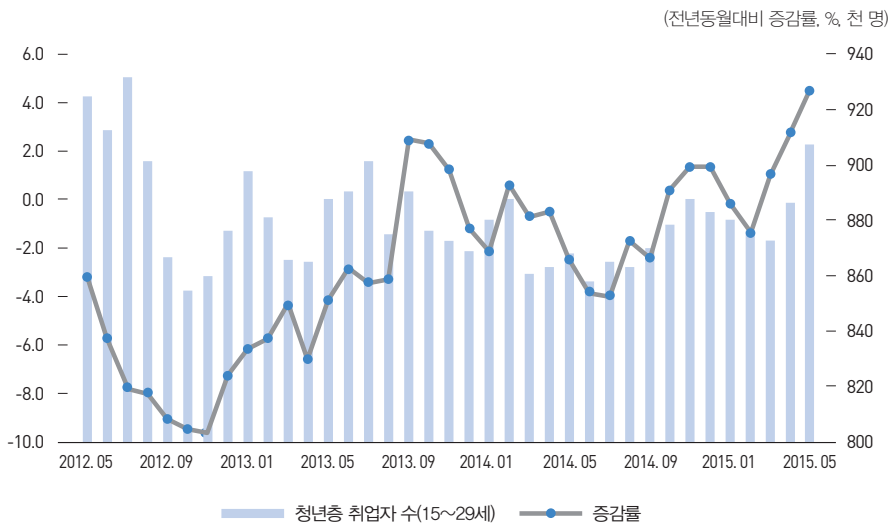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서울의 5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서울의 5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9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
- 3월부터 청년층 취업자 수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서울의 5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61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였으나 고령층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중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경제동향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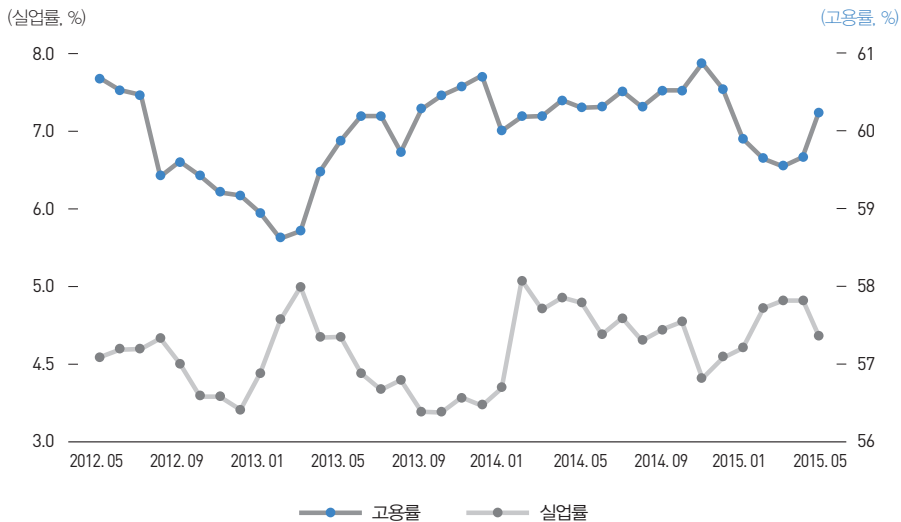
고용률 및 실업률

서울의 5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보합, 전국 보다 낮은 수준

-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4%, 여자는 51.1%로 모두 전년 동월과 동일
- 서울시 고용률은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높거나 같았으나, 4월부터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

서울의 5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5월 실업자는 23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3천 명(-8.8%) 감소
-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 여자는 4.5%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
- 2015년 5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8%)에 비하여 0.6%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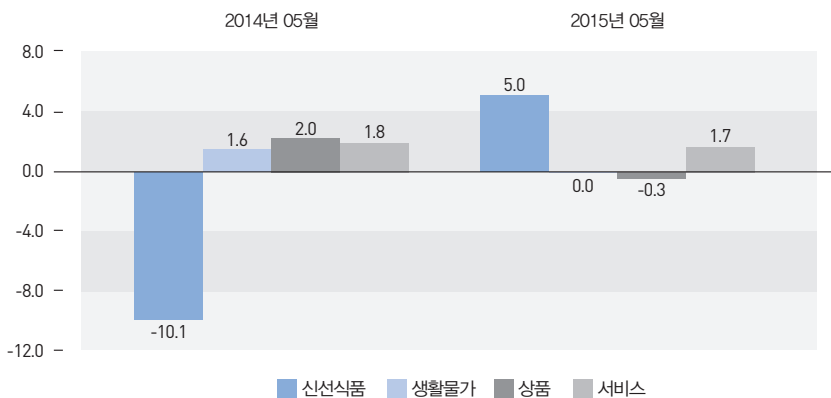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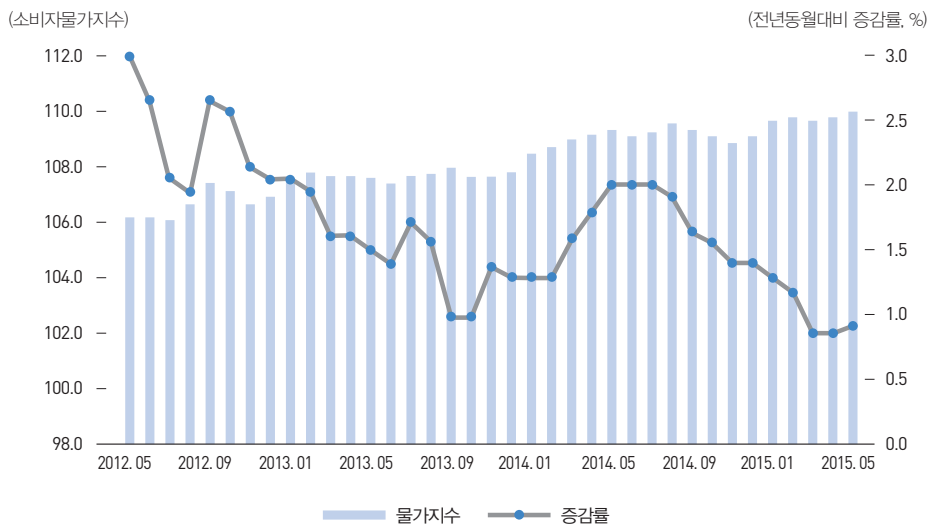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물가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

- 2015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상품물가지수(-0.3%)는 하락한 반면 신선식품물가지수(5.0%), 서비스물가지수(1.7%)는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경제동향 |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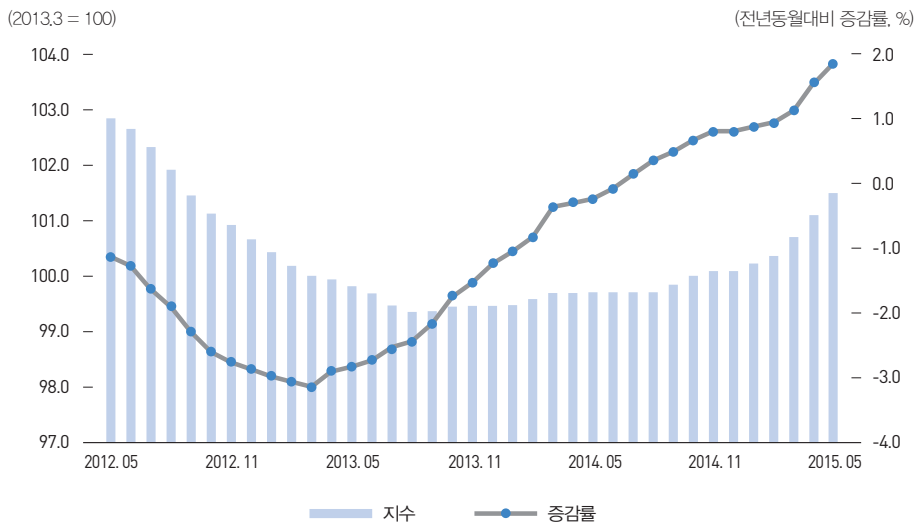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1.4로 전월 대비 0.3% 상승. 강남지역은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 재건축 이주 수요 발생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 강북지역은 매매전환 수요 및 전세물량 부족으로 인한 실수요 발생 영향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
 - 주요 상승지역 : 동대문구(0.77%), 강남구(0.59%), 성북구(0.54%), 강서구(0.44%)

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4.3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 이는 저금리로 인한 구매력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 효과가 결합한 결과.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지방은 전월 대비 각각 0.4%, 0.5%, 0.2% 상승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거래건수는 감소

-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1,701만 원), 매매거래건수(12,608건)는 전월 대비 각각 0.7%상승, 8.2% 감소
- 매매 물량 공급은 제한된 가운데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거래건수는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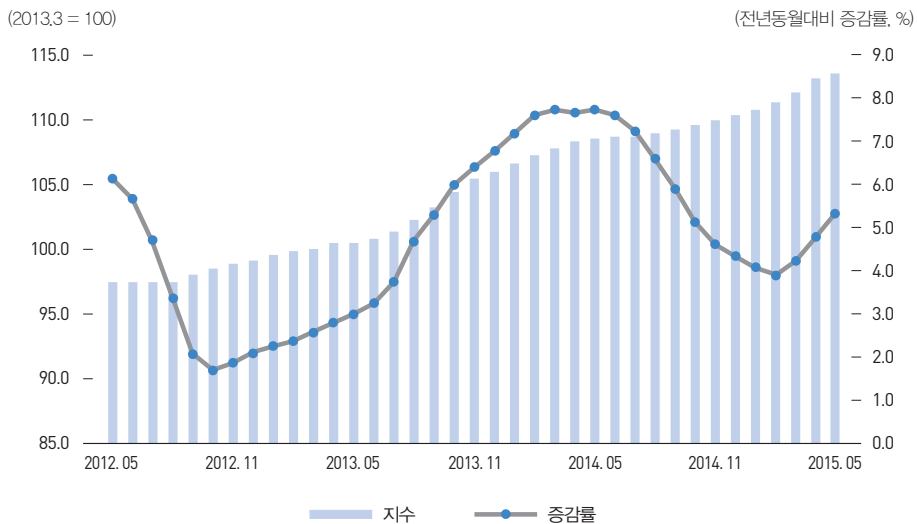
주택전세가격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3.9로 전월 대비 0.7% 상승.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강남지역(0.7%)은 9호선 연장개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마곡지구 개발 효과가, 강북지역(0.6%)은 타 지역 대비 저렴한 전세 가격으로 인한 유입 증가의 영향을 받음
- 주요 상승지역: 중랑구(1.07%), 강서구(0.93%), 성북구(0.85%), 영등포구(0.84%)

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111.2기록. 이는 저금리로 인한 월세 선호와 이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결과.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55%, 0.31%, 0.19% 상승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 대비 증가

- 평당 전세가격(1,127만 원) 전월 대비 1.6% 증가한 반면, 전세거래건수(9,473건)는 전월 대비 10.4% 감소
- 전세 공급 감소,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제동향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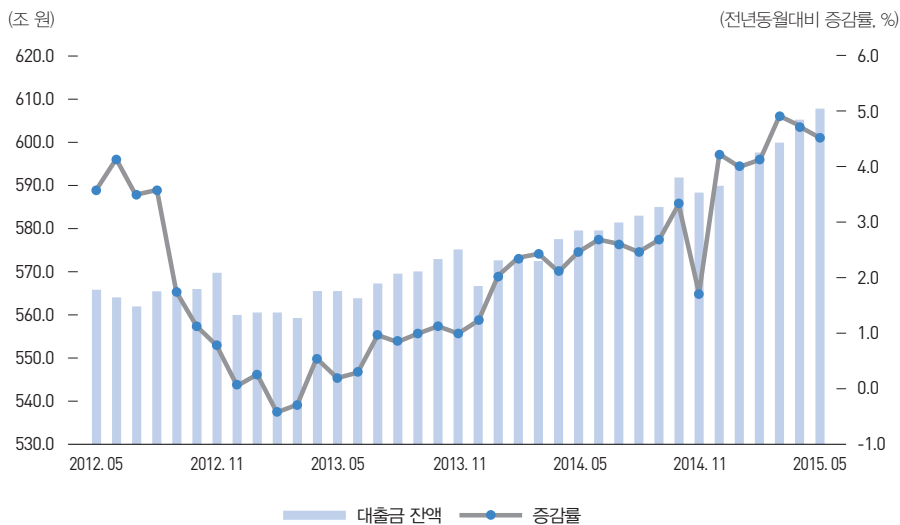
가계대출

5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607조 2,967억 원)은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
- 그 중 예금은행(507조 4,041억 원)과 비예금은행(99조 8,926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1%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4% 증가, 3.7% 감소

5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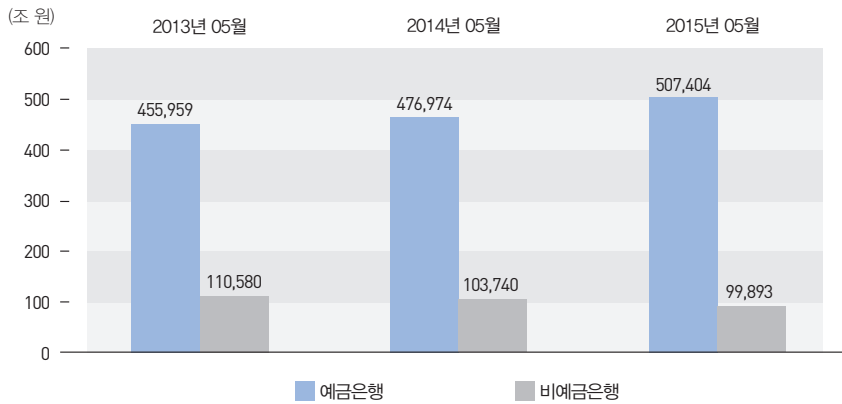
- 전체 대출금 잔액(1,677조 6,267억 원)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
- 그 중 예금은행(1,292조 6,759억 원)과 비예금은행(384조 9,508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4%, 0.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4%, 4.9% 증가



주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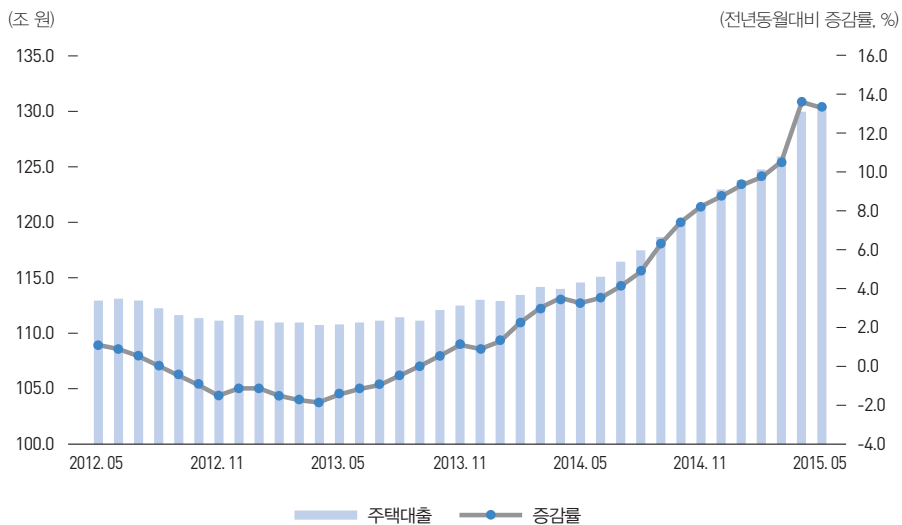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5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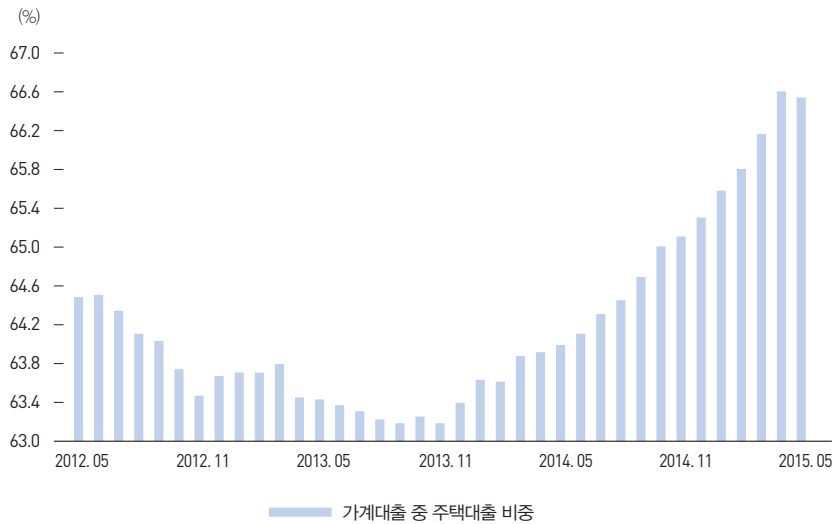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96조 1,069억 원)은 전월(195조 8,371억 원) 대비 0.1%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30조 2,561억 원)은 전월 대비 2.3%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66.5%를 차지



주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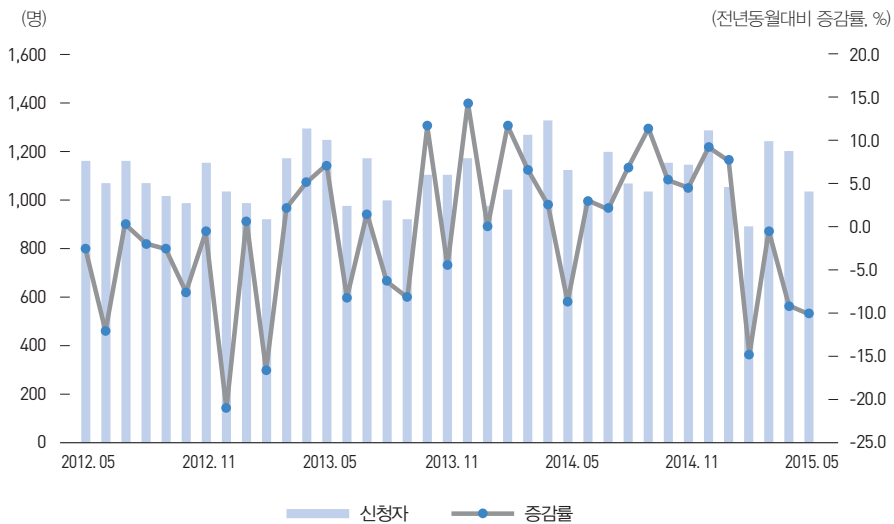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5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

- 서울의 5월 개인파산 신청자(1,025명)는 전월(1,222명) 대비 16.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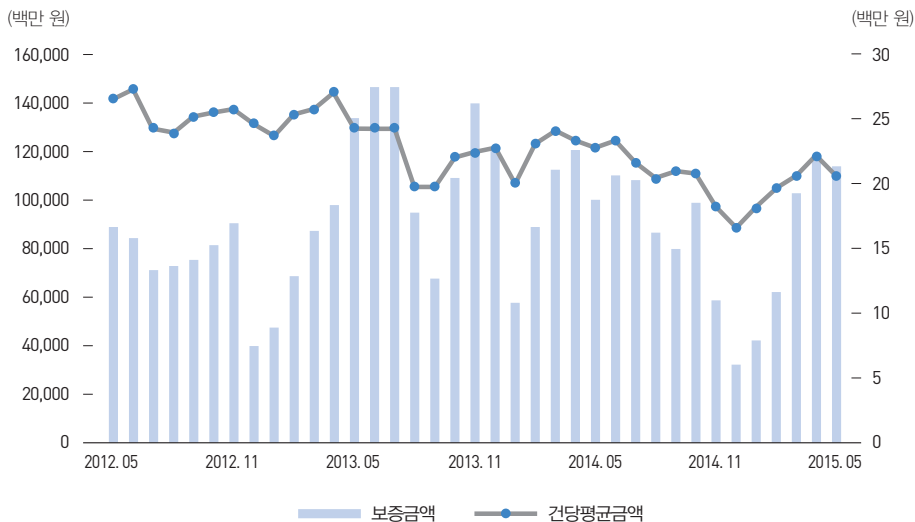
자료 대법원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신용보증

서울의 5월 보증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182억 원 / 5,540건
-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2.9% 감소, 4.5% 증가, 건당 평균 지원 금액(2,130만 원)은 전월 대비 7.4%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13.4%, 24.3%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9.0% 감소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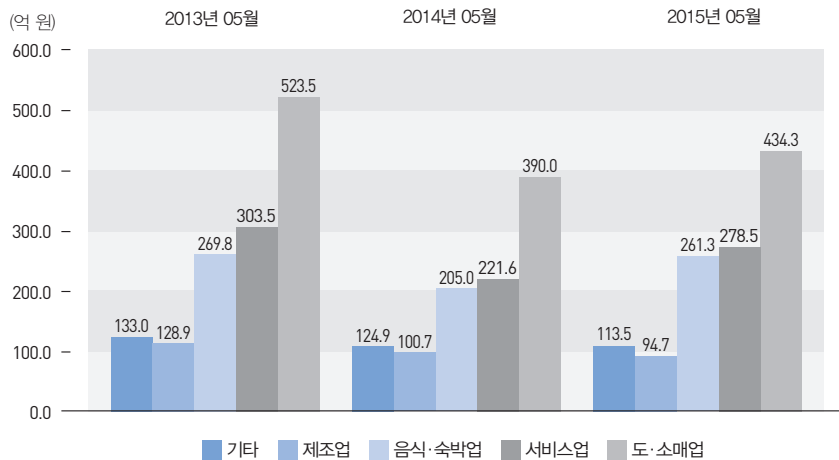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 금액 추이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보증지원

-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434.3억 원으로 전체 보증의 36.7%를 차지. 도소매업 보증지원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 전월 대비 4.8% 감소. 도소매업 보증지원 건수는 전체 보증의 35.1%인 1,946건
- 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7%, 전월 대비 3.9% 증가한 278.5억 원. 서비스업 보증지원 건수는 전체 보증지원 건수의 26.2%인 1,449건
- 제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94.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 전월 대비 7.4% 증가한 수치. 제조업 보증 건수는 전체 보증지원 건수의 7.6%인 42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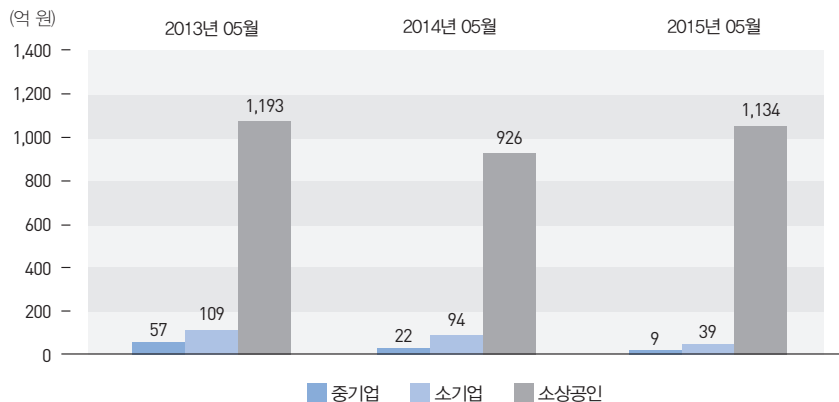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 전월 대비 2.4% 감소한 1,134억 원이며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95.9% 차지.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5,471건으로 전체 보증의 98.8%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7%, 전월 대비 21.1% 감소한 39.1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3.3%를 차지. 중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1.1%인 62건
-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6.5% 감소, 전월 대비 54.1% 증가한 9.4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0.8%를 차지.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0.1%인 7건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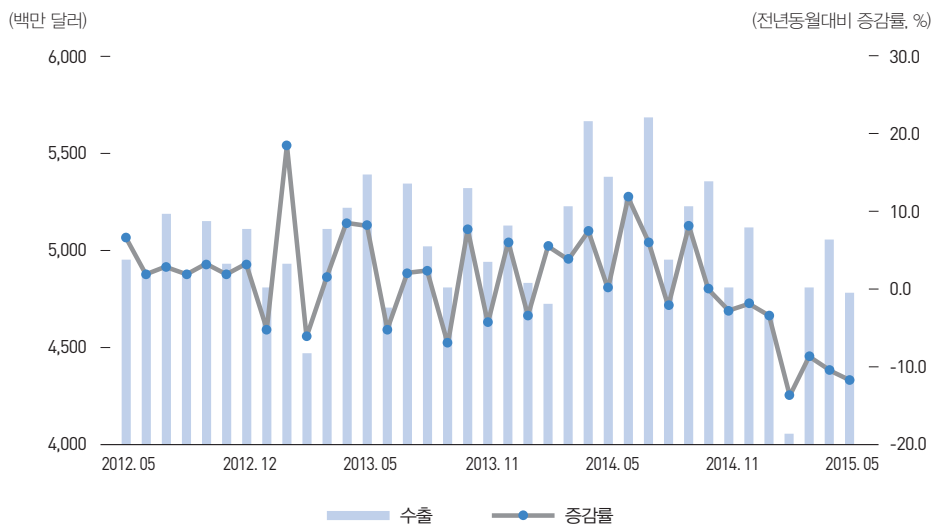
수출입

서울의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7.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8% 감소하였고, 수입은 1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23.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하였고, 수입은 360.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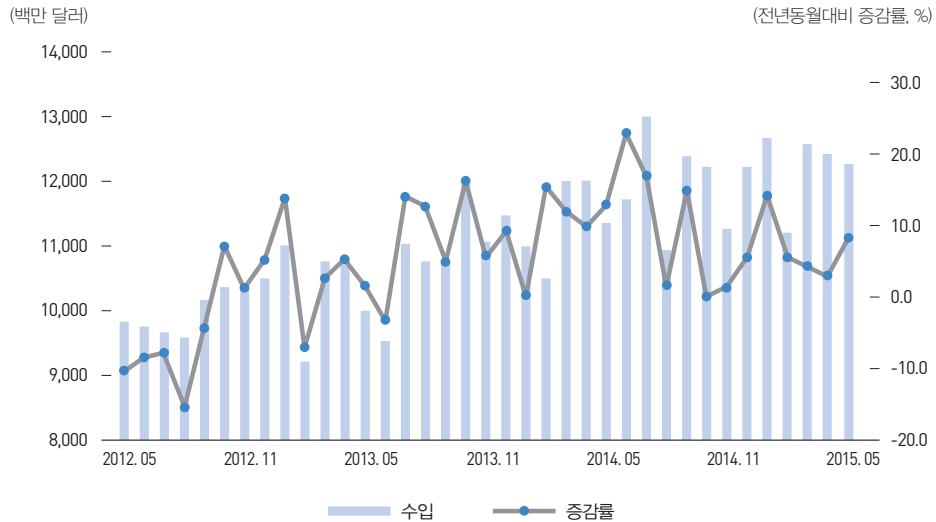
서울의 5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원유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이 450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합성수지, 반도체, 석유제품, 편직물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1,702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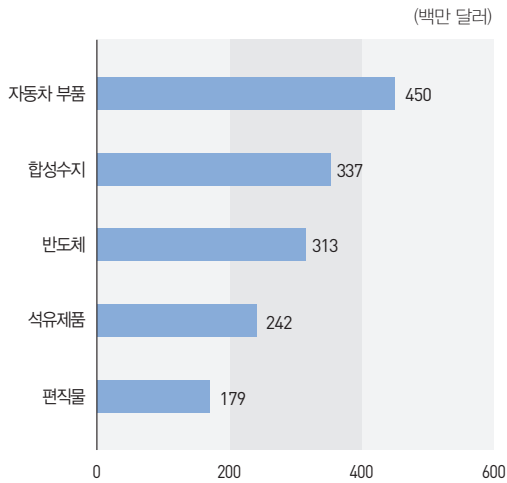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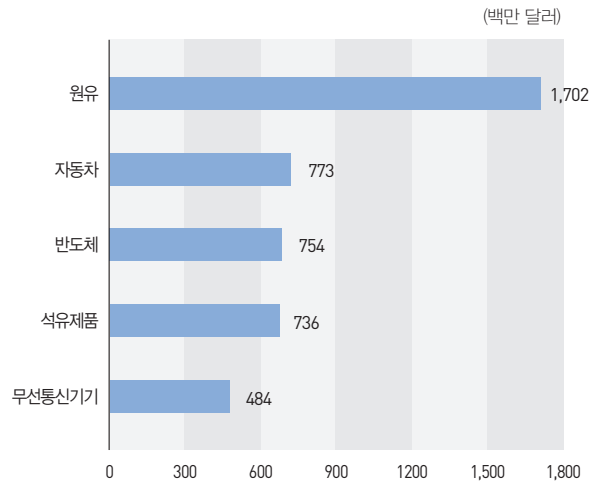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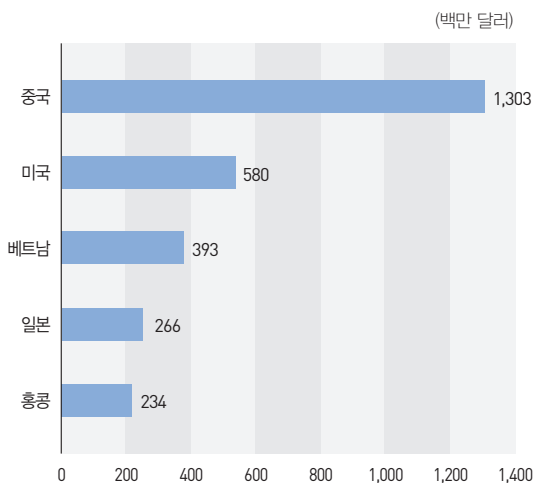
〈그림〉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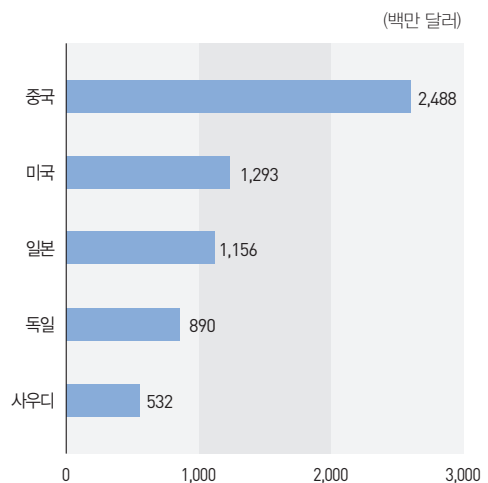
서울의 5월 수출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한 1,30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0% 증가하여 지난달에 이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줌.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달까지의 감소세에서 반등하여 완만한 상승세 시현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한 2,48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순
- 원유 수입 증가에 따라 대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32.4%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외제차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9% 증가



자료 무역협회

〈그림〉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자료출처

자료출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5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5월 서울시 고용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 관세청, 『2015년 5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 국민은행연구소, 『2015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부동산114, 『2015년 5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 중소기업청, 『2015년 5월 중 신설법인 동향』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 통계청, 『2015년 5월 산업활동동향』
- 통계청, 『2015년 5월 고용동향』
- 통계청, 『201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 한국은행, 『2015년 5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 한국은행, 『2015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경제통통



FOCUS

- 창조경제 창시자 '존 호킨스' 서울형 창조경제에 조언
- 서울시,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이전시 보조금 지원

ZOOM IN

- “종로를 귀금속산업 메카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개관

HOT ISSUE

- 세계 패션거물 수지 멘키스, 동대문 찾아 서울패션산업 조언
- 서울시, 취업미끼 신종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발령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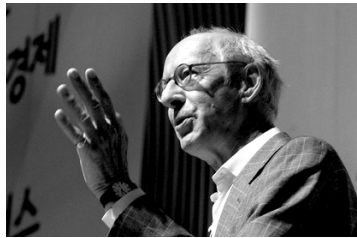
김가영 gykim@seoul.go.kr

FOCUS I 01

창조경제 창시자 ‘존 호킨스’ 서울형 창조경제에 조언

창조경제의 창시자이자 글로벌리더인 존 호킨스가 지난 7월 16일 서울을 방문해 「서울 창조경제 국제 컨퍼런스-지속가능한 혁신: 가치의 재창조」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존 호킨스를 비롯해 美 오스틴시 시장을 지낸 리 러핑웰, 스타트업 위워크 공동창업자 매슈 삼파인 등 창조경제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울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한 서울형 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가치를 확립하고 사람 중심의 서울형 창조경제모델 구축에 관한 적용점을 찾았다.

존 호킨스,
변화하는 창조성과
혁신트렌드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밝혀



존 호킨스는 기조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창조성과 혁신트렌드가 인재, 사업모델은 물론, 도시와 국가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대응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각 세션에서는 선진 국가와

글로벌기업의 창조경제 추진, 글로벌 스타트업 양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공유했다.

리 러핑웰, 前오스틴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창조문화를 통해 미국 내 최우수 도시가 된 오스틴시의 성공비결을 밝혔고, 임경묵 CJ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문화콘텐츠, 식품, 물류 등 새로운 산업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42개 지역에서 사용공간을 빌려주고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위워크의 공동창업자인 매슈 삼파인은 위워크의 발전방안과 커뮤니티의 힘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형 창조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과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이 창조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 시내에 창조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창의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창조경제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FOCUS I 02

서울시,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이전시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국내외 금융기관
여의도에 신규 창업시
최대 25억원 및
고용·교육훈련
자금 지원**

30일에 공포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하여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다.

거래스나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 원 이내(1인당 최대 3백만 원), 기관당 2억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천만 원 이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며,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산업 발전여건을 조성한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로 보조금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와 계획을 빠짐없이 요구하는 동시에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중심지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관련 지원이 전혀 없어 아시아의 경쟁도시 대비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입지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ZOOM IN | 01

“종로를 귀금속산업 메카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개관



서울의 미래를 이끌 도심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주얼리산업을 활성화하고 종로3~5가 일대를 주얼리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종로구 권농동에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주얼리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의 첫번째 역할은 서울의 주얼리산업을 소비자

에게 알리고 국산 주얼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해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것이다.

먼저 시민홍보를 위해 센터와 인접한 종로 3가역을 ‘주얼리테마역’으로 조성하고 주얼리거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

둘째, 고가의 귀금속, 보석관련 첨단장비를 구비해 귀금속 감정소 및 업체 학교·연구기관의 보석·다이아몬드 감정 업무를 지원한다.

셋째, 주얼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업·창업 컨설팅과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

넷째, 센터 1층에 금거래시장(금인출센터)을 유치해, 종로지역 귀금속 업체의 금수급 편의 및 양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주얼리산업을
고부가가치 도심형
제조업으로,
종로일대는 창조적
산업클러스터로**

서울시는 이번 센터 개관을 계기로 주얼리산업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도심형 제조업으로 재탄생시키고, 더불어 종로일대를 서울경제에 기여하는 창조적 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주얼리지원센터 제2관을 우리전통가옥인 한옥형태로 개관해 이곳을 주얼리전시관 및 체험관, 공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패션거물 수지 멘키스, 동대문 방문 및 서울패션산업 조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저널리스트 수지 멘키스(Suzy Menkes)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 동북아 패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의 패션 산업 현장 곳곳을 방문했다.

인터내셔널 보그 에디터인 수지 멘키스는 전 세계 19개국 보그 웹사이트에 패션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로 그녀가 쓴 패션뉴스를 보는 사람만 3천 8백 여 만 명이다. 또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컨퍼런스' 총 주관자로도 활동 중이다.

**내년 4월 서울서
개최되는 '컨데나스트
럭셔리 컨퍼런스'
성공개최를 위해 내한**

이날 첫 일정은 동대문 'DDP'. 수지 멘키스와 박시장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6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컨퍼런스'의 주제와 콘셉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번째 일정은 '신진 디자이너의 인큐베이터'로 유명한 '두타'에 방문하였다. 수지 멘키스와 박시장은 젊은 디자이너들을 만나 자금 지원부터 유통·판로 개척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 방문지는 국내 최대 원단 및 의류부자재를 판매하는 '동대문 종합시장'이다.

박시장은 이곳에서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일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및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시장은 이번 수지 멘키스와의 만남을 통해 서울시 패션디자인과 제조·판매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공유하고,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패션산업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얻어 패션도시 서울조성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또 더 나아가 관광지로서 동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세계인을 매료시킬 서울의 관광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HOT ISSUE I 02

서울시, 취업미끼 신종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발령

▶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강남의 한 대부업체의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는데, 회사 대표가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했고 대출을 받는게 불안했으나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00만원을 대출했고, 그 후 회사대표는 돈을 갖고 잠적했다.

서울시는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피해가 늘고 있다며 유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27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 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변형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제3자가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고,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고, 대부업체 취업 해는 서울시 민생침해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취약 계층별, 분야별 민생침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취업사기 동영상 제작해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 공유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